

도내 공기업 출연기관 기관장 연봉 1억대

도의회 허남주 의원 자료... 군산의료원 1억2000만원-전북연구원 1억320만원-전북테크노파크 1억200만원 순

도내 공기업 출연기관 기관장과 간부 연봉은 얼마나 될까.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들의 연봉을 들여다보면 일이 적 벌어진다. 또 서민들의 힘을 빼지게 한다. 이들 기관장들은 중앙 공무원이나 도 공무원 출신들로서 일반 봉급 생활자들이 꿈도 못 꿀만큼 챙겨가고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지를 정도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옮겨가 더 많은 급여와 정

년이 연장되는 수혜를 받는 등 서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당)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공기업 출연기관 기관장 연봉이 대부분 1억원대(성과급, 업무추진비 포함)로 나타났다. 기관장 기본 연봉중 가장 높은 곳은 군산의료원장 1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북연구원 1억320만원, 전북테크노파크 1억200만원, 예코융합섬유연구원 9,390만원, 전북자동차기술원 9,063만원, 전

북생물산업연구원 9,0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8,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봉은 성과급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실장, 본부장 등 간부급들의 급여 역시 평균 6,000만원대를 훌쩍 넘어, 도민들에게 있어 그들만의 리그인양 자괴감과 함께 공공기관 민낯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위탁, 보조기관 간부들의 급여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컸다. 전북도체육회 스포츠진흥처장의 경우는

8,157만원인데 반해 전북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2,581만원에 불과,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컸다. 허남주 의원은 "15개 출연기관 중 6개 기관, 9명의 임직원이 전북도와 전주시 공무원 출신이다. 또 8개 위탁 보조기관에서도 2개 기관이 전주시 공무원들로 나타났다"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던지, 중앙정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지 출연기관 임직원 선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오늘 도청서 '자치현장 토론회' 지방의회 활성화·책임성 제고 주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약칭 '자치위')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자치현장 토론회를 전북 전주에서 7월 12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의 추진에 자치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동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 발표는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다. 신기현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과 지자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제도화 필요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조 개선을 강조한다. 이어, 허남주 전북도의회 의원, 우현규 정읍시 의원, 박재을 균형발전지방분권 대표, 최영출 충북대 교수 등이 각계의 입장을 대표해 토론한다. 또한 전북도의회 의원과 전주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전북대학교 학생 등이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실현되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신광영 기자

기관명	직위	기본연봉	성과급	업무추진비	비고(출신)
전북개발공사	사장	83,493	16,887	4,772	도공무원
	실장	68,051	12,587	837	전공무원(공사출신)
	본부장	65,825	12,354	569	-
	본부장	67,578	10,570	1,388	도공무원(공사출신)
전북연구원	원장	108,209	-	33,550	-
	실장	61,859	12,991	-	-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02,000	8,500	22,587	중앙공무원
	단장	80,000	6,666	5,986	-
	단장	81,560	6,925	5,828	-
	실장	66,450	6,267	5,318	-
	단장	63,000	5,875	-	-
	실장	55,560	5,875	-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90,000	-	8,435	중앙공무원
	실장	60,744	5,451	-	-
	센터장	63,067	-	-	-
	원장	93,900	5,477	5,399	중앙공무원
예코융합 섬유연구원	실장	59,054	3,556	-	도공무원
	실장	53,037	3,446	-	-
	실장	54,237	3,556	-	-
전북 자동차기술원	원장	90,630	-	14,236	도공무원
	실장	66,460	10,275	-	-
	실장	78,258	11,904	-	-
	실장	53,697	9,051	-	-
	센터장	70,927	10,789	-	-
	실장	65,218	9,889	-	-

표 1 공기업 간부 급여 현황

기관명	직위	기본연봉	성과급	업무추진비	비고(출신)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84,000	-	12,000	-
	부장	58,769	9,112	-	-
	부장	56,425	8,645	-	-
	부장	50,261	9,801	-	-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지점장	55,955	8,899	2,400	-
	지점장	48,809	9,271	2,400	-
	원장	90,000	625	22,600	-
	실장	52,470	2,550	-	전주시 공무원
군산의료원	실장	53,295	10,037	-	-
	단장	59,799	14,749	-	-
	원장(전문의)	120,000	-	-	-
남원의료원	관리부장	21,464	-	-	* 업무추진비 군산 20,095원 / 남원 28,125원
	원장	75,596	-	-	(민정, 부장 별도로 업무추진비 없음) 도공무원
전라북도 성교육 문화센터	관리부장	51,832	-	-	-
	센터장	69,484	6,948	4,200	-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62,981	-	-	150명 채용
	서울원장	64,983	5,458	9,778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전주원장	64,983	5,458	9,737	전주시 공무원
	센터장	50,282	-	7,800	-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68,000	-	12,000	-
전북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원장	65,000	-	12,000	-
	본부장	51,023	-	4,800	-

표 2 공기업 간부 급여 현황

도내 정당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우려' 표명

도내 각 정당들이 현대중공업 폐쇄문제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폐쇄문제를 협의하고 설득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7.2%를 차지하는 등 전북수출의 견인차 구실을 해 왔지만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가 예상되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도크 가동중단이 결정되면, 직영 726명, 사내협력업체 40개사 3,109명, 사외협력업체 8개사 259명, 사외2차 협력업체 38개사 1,038명 총 5,132명의 직원이 이 중 약 90%에 해당되는 전북도민 4,500여명의 일자리는 사라질 전망이다. 근로자의 가족, 관련 경제활동 종사자 등 약 2만여 명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전북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11일 논평을 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설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현대중 군산조선소가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고용 및 부가가치를 감안할 때, 군산 서민경제의 초도화 내지 공동화는 물론 전북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면서 "현대중공업 역시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민들의 성원을 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 철수보다는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미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진호 도의원 "곤충산업을 '돈버는 농업'으로"

도내 곤충사육농가 49곳으로 전국의 7% 불과... 종합계획 수립하고 지원 확대해야

곤충산업을 '돈버는 농업'으로 실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호 도의원(국민의당, 전주6)은 "2015년 12월 기준, 도내 곤충사육농가는 총 49개 농가로 전국 724개 농가에 비하면 약 7%에 불과하다. 또 곤충관련 사업도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유용곤충 사육시험 사업과 축발기금 용자로 4억원을 지원하는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부다"며

"이런 지원이 농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남, 충남, 경기도 등에서는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기반, 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은 종합계획도 없이 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인지라 과연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우리나라 곤충시장 규모는 2011년 1,880억원에서 2015년 3,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4월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

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곤충산업 규모를 현재 약 1.7배인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육농가를 1,200호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전북도는 곤충산업 생산기반을 비롯해 교육, 기술개발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곤충산업의 국내외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전북도는 곤충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의원, 특교세 22억원 확보

국회 정운천(전주시, 새누리당) 의원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정비사업(15억)과 백제대로 도로정비 사업(7억) 등 총 22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당시 건립돼 15년이 경과된 시설로 노후된 경기장 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백제대로의 경우 많은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이지만, 통행로 미설치 등 도로여건이 취약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정운천 의원은 "2017년 FIFA U-20 월드컵대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이 확보돼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전주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

제10대 전북도의회가 11일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갖고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 의회실현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강한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황헌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은 도민과 전북의 운명을 집행부와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생활정치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앞으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23년 세계펜타대회를 유치, 그리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미래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의 자치발전,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힘을 결집하는 협치의 전당이 되겠다"고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교육위, 나항목 정책기획관 물의 정부 사과·장관 퇴진 주장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나항목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정권차원에서 사과하고 장관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11일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물리적인 폭력이나 탄압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아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말의 폭력으로 결코 물리적 폭력에 버금가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아울러,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국민모욕 행위의 당사자인 나씨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교육부 장관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